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김정혜 부연구위원

스토킹 대응의 법적 한계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초록

- 오랜 논의를 거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 시행됨으로써 스토킹행위자의 제재와 처벌, 이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한 스토킹의 범위가 좁고 그에 따라 가해자 제재 수단이 미흡하며 사건 처리 과정 및 사건 처리 과정 외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이 거의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됨.
- 이 연구는 스토킹 관련 법률과 정책의 한계를 살피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스토킹 관련 법률의 개정 방안을 제시함.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가해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계
	연인	과거 연인	연인 외 관계	배우자	과거 배우자	배우자 외 관계	친구/선호배	학교 관계자	직장 관계자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으로 알게된 사람	동네 사람	관계자의 지인	기타		
인원수	28	358	28	0	18	6	41	2	75	21	56	131	25	204	178	1,171
비율	2.4	30.6	2.4	0.0	1.5	0.5	3.5	0.2	6.4	1.8	4.8	11.2	2.1	17.4	15.2	100.0

* 주: 2020년 기준. '연인 외 관계'는 "사귀지는 않으나 데이트를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2020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보고서』 10, 19쪽.

스토킹 상담 중 데이트 관계의 비율



1. 배경 및 문제점

- ▶ 스토킹은 주로 유명인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집착 행위로 이해되어왔으나, 스토킹에 대한 상담과 연구 결과는 스토킹이 더 일상적이고 만연하며 성별화된 행위임을 보여줌. 특히 스토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이별폭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고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함.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상담 현황을 보면, 전체 스토킹 상담 중 84.8%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였고, 가해자 유형 중 과거 연인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10). 스토킹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스토킹의 성질과 관계의 특성이 성별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가 배우자 등 가족이거나 현재 또는 과거의 데이트상대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이나 사랑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영향을 살피기보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관대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사소화하고 스토킹을 통상적인 애정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구애 행위나 갈등의 일종으로 간주하며 병리적 행동만을 규제가 필요한 스토킹으로 이해하게 되면, 과거와 현재의 데이트 관계,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강압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스토킹과 같이 사회적으로 정상화된 스토킹의 해악과 젠더폭력으로서의 성질을 발견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워짐. 스토킹은 일견 일상적인 듯 보이는 개별적 행위들을 종합하여 일련의 사건을 맥락적으로 파악할 때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상의 평온을 해치는 스토킹으로서의 성질이 비로소 드러나기도 함. 그러나 친밀관계에서의 스토킹을 사소화하는 태도는 여러 행위들을 종합하기보다는 개별적인 행위로 분절시켜 각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도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오류로 이어져 스토킹 피해 호소를 실체 없는 위협으로 결론내리도록 함.
-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 납치, 감금,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의 쟁점화 등으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대응 요구가 고조되면서, 일련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을 2021년 10월 시행함. 그러나 새로 마련된 법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며, 기존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 ▶ 그간 국회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시도를 지속해왔으나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도 대부분 스토킹범죄의 사건 처리와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그러나 스토킹은 지속적, 반복적인 접근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안전, 자유와 생활상의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수사와 재판이라는 장기간의 절차를 거친 이후의 가해자 처벌만이 아니라, 곧바로 스토킹을 중단시키고 이후 스토킹이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의 생활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긴절한 영역이라 할 것임. 즉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 지원할 것인지는 스토킹 대응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음.

2. 분석결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스토킹 발생을 방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이 책임성 있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산 편성 및 주요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함.
- ▶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을 비롯하여 스토킹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규정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토킹이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위협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 가해와 피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상당한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토킹의 주피해자와 스토킹 상대방의 안전 확보, 피해자 지원자의 안전 확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할 것임.
- ▶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는 단지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소극적, 방어적인 피해의 방지 및 회복 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생활상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생활상의 평온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생활상의 평온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관련 조치, 일상 필수 활동 동행, 일시보호, 주거이전비 지원, 피해자의 생활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한 도구의 지원 또는 구입설치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② 스토킹 및 스토킹 피해자의 정의

-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매우 협소함. 상대방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따라다니는 행위처럼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나 물건, 서비스를 비롯하여 어떤 형태이든 간에 피해자에게 무엇인가가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 피해자와 친밀한 제3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만한 행위, 직접적 접근은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거나 추적당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여 생활상의 평온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모두가 스토킹에서의 ‘접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는 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며, 사람이나 물건이 직접 전달되는 스토킹의 대상은 상대방과 동거인, 가족으로 제한적이고, 제3자를 이용한 접근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부족함. 스토킹의 협소한 정의로 인하여 사건 처리 절차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범위가 축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서 「스토킹처벌법」의 정의를 준용할 경우 피해자 보호법을 통한 피해자 보호 범위 또한 매우 제한될 위험이 있음.

- ▶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차선택으로 스톱킹 피해자 보호법에서 피해자 보호 대상이 되는 스톱킹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정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수사, 재판 절차에서의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한 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는 여전히 좁을 수밖에 없고 주로 가해자 제재와 무관한 피해자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스톱킹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처벌법 개정이 필요함.

③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 ▶ 스톱킹 ‘범죄’ 피해자는 일반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대상이 되며, 스톱킹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포함됨.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스톱킹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음. 그러나 어느 지원체계에서도 스톱킹 피해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 ▶ 스톱킹은 젠더폭력, 친밀관계폭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임.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스톱킹 피해자를 지원할 때, 스톱킹에 수반되는 젠더폭력과 연관성을 살피며 종합적인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젠더폭력피해 지원체계 내에서 젠더폭력의 성격을 갖는 스톱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강하고 스톱킹 피해자 지원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 그러나 스톱킹은 동기, 행위 방법, 가해자의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특성 등에서도 매우 다양하며, 모든 스톱킹이 젠더폭력의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도 없고, 스톱킹에 대응할 전문성도 요청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만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스톱킹 피해자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젠더폭력과 무관한 스톱킹 피해자 지원이 자칫 젠더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거나 젠더폭력 피해 지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음.
- ▶ 가정폭력, 성폭력에 수반되는 스톱킹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톱킹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스톱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기관과 협력하며 내용상, 재정상 지원할 것을 제안함. 단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톱킹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센터 내에 스톱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두며 경찰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위치를 경찰서 인근으로 하는 등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입소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중장기적으로는 스톱킹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④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지원

- ▶ 스톱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추적, 감시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임. 젠더폭력 또는 범죄로서 스톱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보호·지원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 스톱킹 피해자에 대하여 스톱킹의 속성을 이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상담, 심리상담, 스톱킹의 위험성 평가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안전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함.

- ▶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돌보는 가족구성원 등이 거주지, 직장, 학교 등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긴급생계지원, 주거지 이전 지원, 단기 혹은 중장기적인 보호나 주거 지원, 취학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하여야 할 것임.
- ▶ 취학 지원의 범위는 피해자와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야 실질적인 보호를 달성할 수 있음. 또한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취업 지원이 필요하게 된 사람을 포괄하여야 함.
- ▶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치료에 대한 의료 지원,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의 법률 지원을 하여야 함.
- ▶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의 흔적에 대한 삭제 요청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직장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 ▶ 스토킹의 주피해자 및 스토킹의 상대방이 된 사람들은 사건의 신고나 사건 처리 절차의 진행, 피해 회복 과정에서 고용상, 업무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스토킹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직장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 소극적인 피해자 보호라면,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에서 벗어나고 평온한 일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 보호에 해당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에서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근무 장소 변경, 근무 시간 변경, 배치전환 등을 허용하도록 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도 스토킹의 중단을 위한 조치와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5 사건 처리 과정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 응급조치 등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 ▶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핵심은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넓혀 행위자가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거나 스토킹행위에 이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통제하는 것이므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 범위에 상대방 또는 피해자와 그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함.
- ▶ 스토킹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잠정조치나 긴급임시조치도 스토킹 행위의 다변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조치 내용을 확대하거나 포괄적인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변안전조치

- ▶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 그로 인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예방적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으므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

- ▶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형태이므로, 추가적인 접근 및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하여 절차상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방대하게 수집될 수밖에 없고 피의자, 피고인에게 노출되기 쉬움.
- ▶ 피해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고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정보를 일단 기재한 이후 이를 가리도록 하거나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보호받으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의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조사 및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등 보호·지원

- ▶ 「스토킹처벌법」은 수사 과정에서의 전담조사제 외에는 조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등 보호·지원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 ▶ 스토킹은 피해자 등의 정보 및 신변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중요하고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 또한 높으므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 중 심리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률적 조력을 위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방식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면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가해자의 신병과 사건의 처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계획하고 생활의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속적, 반복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킹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에만 통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권을 적극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피해자보호명령

- ▶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등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두지 않았음. 반드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대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보호의 지속성 확보

- ▶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 또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접근 금지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유지하면서 각 사례에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결정의 자동 효력 상실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 유죄 판결 이후에도 스토킹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식명령,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유죄판결 선고 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스토킹 상대방,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접근 등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병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제언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입법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만드는 방안이 적절함.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목적은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제정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1>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의 구성

제1조(목적)	제10조(의료 지원)
제2조(정의)	제11조(생계 지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정보의 삭제 지원)
제4조(안전과 생활상의 평온 보호)	제13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 금지)
제5조(교육·훈련)	제14조(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등)
제6조(취학 지원)	제15조(피해자 지원기관)
제7조(취업 지원)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존중)
제8조(법률 지원)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제9조(주거 지원)	제18조(벌칙)

- ▶ 법률안에서 ‘스토킹’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안전의 위협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안전의 위협만이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함. 스토킹은 일련의 행위로서, 안전의 위협, 불안감 또는 공포심 등은 스토킹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행위 각각에 대하여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토킹을 구성하는 여러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두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②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③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④ 신변 관련 정보 보호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⑥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⑦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⑧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인 조치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스토킹의 수사 및 재판 업무 종사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 스토킹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는 피해자가 보호 또는 양육하는 미성년 또는 학생의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취학 지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인하여 취업이 필요하게 된 피해자의 주변인을 포함한 취업 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에 대한 생계 지원,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스토킹피해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에 위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
- ▶ 사용자가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인,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누구든지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행정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스토킹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거주지 이전 등 스토킹과 관련된 이유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 허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 연락처 변경,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하며, “피해근로자”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는 ①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 ②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안전 계획의 수립, ③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 지원, ④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⑤ 의료 지원, ⑥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⑦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지원 요청, ⑧ 스토킹 예방 홍보, ⑨ 스토킹 및 스토킹피해 조사·연구, ⑩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 ▶ ‘스토킹행위’의 정의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행위 성립 판단의 초점을 가해자에서 피해자에게로 전환할 뿐 아니라 다른 구성요건과도 중복되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는 스토킹의 대상을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함. 제3자를 통한 스토킹을 주가해자에 의한 스토킹의 범주에서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함.
- ▶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예시규정으로 변경하여, 예시 나열과 더불어 그와 비교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포괄적 보충구성요건을 두고 예시의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명확성을 확보하고 해석에서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음. 스토킹의 행위 유형으로는 ①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②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 ③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④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⑤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 영상, 그림,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⑥ 반려동물 등 상대방이 돌보는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동물학대 행위를 추가하고, 포괄적 구성요건으로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해석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구성함.
-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함.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 범위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서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잠정조치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추가함.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처벌로 변경하도록 함.

- ▶ 신변안전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병과 사건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또한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심리와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 변호사 선임 및 국선변호사 선정,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규정을 두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수사 및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보호 등의 조항을 보복 우려 요건을 제외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적용하도록 함.
-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명령 유형에 유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며 보호명령 이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
- ▶ 유죄 판결 이후 스토킹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과하도록 함. 또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며 스토킹 행위자의 면책을 가능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참고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2020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보고서』.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행정안전부 주민과